

## “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” 수립 · 추진

### 주요 내용

-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"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"을 발표하고 이중 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」과 「지방금융의 활성화」의 세부안을 마련
  -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본사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
    - 당초에는 200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이전을 착수할 기업까지 확대
  - 이전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공장·사옥 및 학교를 건축하는 경우 국·공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
- 지역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
  -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지역펀드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
  - 지자체 금고, 법원 공탁금, 각종 연기금 등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

### 향후 전망 및 평가

-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 이전과 지역금융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됨
  -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업무 배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의 배분이 선행되어야 함
  - 즉 본 세부안에서는 제외된 지방재정·행정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

(박용주 연구위원 [yjpark@hri.co.kr](mailto:yjpark@hri.co.kr) ☎ 3669-4012)

### 최근 주요 정책(2000. 3. 27 ~ 4. 9)

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	통일부 (4.10)	- 오는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-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2000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	금융발전 심의회 (4.6)	- 기본 방향: 금융시장 개혁을 통한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의 전환,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,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 완결 - 목표: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
정보화 전략회의 개최	정부 (4.6)	- 정보화 추진 방향 및 각 부처별 실천계획 발표 · 추진 방향: 정보 접근기회 확대, 정보 활용능력 제고, 민·관 역량의 총체적 활용 -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존 산업의 정보화 촉진 방안 발표 · 정보화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, e-business 체제로의 전환 등
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 확정	건설교통부 (4.6)	- 기본 방향: 낙후된 국내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행, 시장 기능에 의한 경쟁의 룰 확립 - 세부 방안: 내년부터 공사이행보증제가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, 낙찰율 상향 조정, 감리 기능 강화 등
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확정	정부 (4.4)	- 「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」의 구체적 실천계획 - 중점 추진 전략: 지식경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, 정보인프라 고도화,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,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, 창의가 충만한 인재 양성, 지식정보 격차의 사전 차단
자동차산업 육성 종합 대책 마련	산업자원부 (4.3)	- 자차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10대 과제 적극 추진 결의 -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중점
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	금융감독 위원회 (3.31)	- 상장기업이 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」 준수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공시 서류에 기재하도록 함 - 유가증권신고서는 4월 이후 제출되는 신고서부터, 사업보고서는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부터 적용
무역·외국인투자 진흥대책 보고	산업자원부 (3.27)	- 무역진흥대책 방향: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·선점, 시장성숙도에 따른 수출전략 차별화, 디지털시대 무역역량 강화 - 외국인투자진흥대책 방향: 산업경쟁력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, 고객만족형 외국인투자환경 조성
단시간 근로자 보호 지침 시달	노동부 (3.27)	-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, 연·월차 휴가, 퇴직금 부여 등이 골자

### 주요 정책 정보(2000. 4. 10 ~ 4. 16)

4. 14(금)	○(노동부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· 산재보험제도의 4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(7월 1일)를 앞두고 제도 정비 ·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합리적 개편, 후유증상진료제도 도입, 산재심사 절차 개선 등
1. 21(금)	○(기획예산처) 예산성과금 지급 ·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1인당 2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